배출시설 규제 사업장별방식 전환해야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의 경감과 생산활동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정별 규제방식 대신 사업장별 배출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9월 19일 대한상의가 발간한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연구집필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또 장기적으로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별 규제방식이 도입된 이후 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 부분 축소됐으나 생산설비의 교체나 추가설치 등 배출시설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음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려는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들이 배출시설을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급속한 신기술 개발과 제품수명 단축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빈번한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류준비로 인한 생산현장의 애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배출시설과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장별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운행때 질소산화물 7배이상 높아져

차량이 운행될 때 측정한 오존생성의 주범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정지때보다 최고 12.5배, 평균 7.7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지난 87년부터 95년 사이에 생산된 휘발유 승용차와 LPG 택시 1백53대를 대상으로 최근 운행차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측정 결과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시동만 켜놓은 완전 무부하상태에서 최저 33.41ppm을 보였고, 일반 주행상태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부하상태에서는 최고 4백 18.93ppm에 달해 그 차이가 무려 12.5배에 달했다.

여러번의 측정 결과 평균한 질소산화물농도는 무부하상태에서 53.19ppm, 부하상태에서는 평균 4백 15.95ppm으로 부하상태에 따라 평균 7.7배 차이를 보였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이 공기중에 있는 탄화수소류(HCs)와 함께 강한 태양광선을 받으면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된다.

특히 오존생성주범인 질소산화물은 서울지역의 경우 자동차에서 81.4%(전국 52.6%)가 배출되고 있으며 자동차 가운데 대형 경유차에서 서울은 87%(전국 82%)가 배출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검사는 무부하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검사항목에서 질소산화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매연, 공기연료비만을 측정하고 있다.

내년도 환경예산 10.8% 증액편성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보다 10.8% 증액된 1조 1천9백71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98년도 환경부 예산편성액은 올해의 1조 8백2억원보다 10.8% 늘어난 1조1천9백71억원으로 정부의 평균 예산 증가율 5.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세수결함 등 정부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민들의 맑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관리 등 물 분야는 6천3백17억원으로 올해보다 11.1% 늘어났으며 특히 낙동강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1백51억원이 책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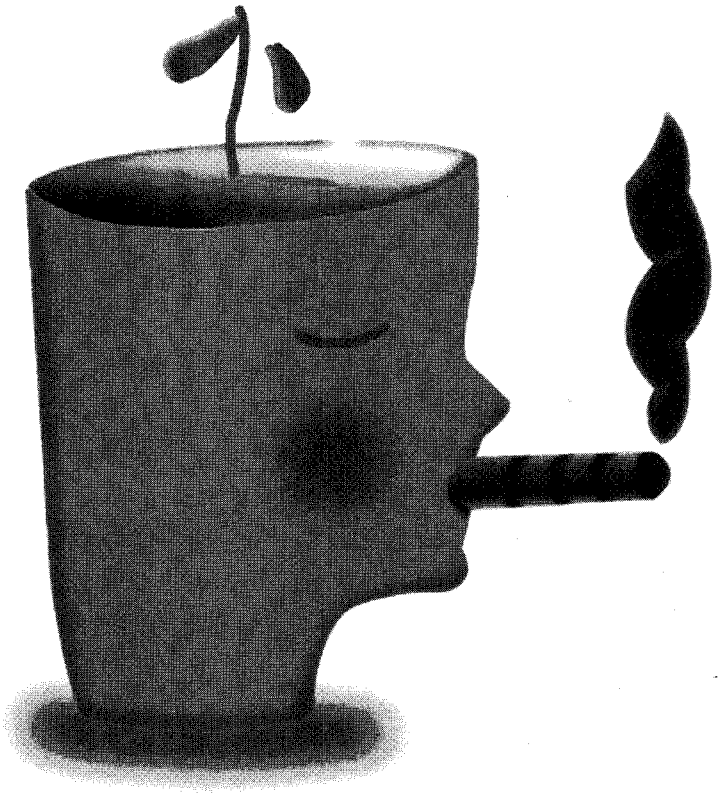
또 공단 하·폐수 처리장의 설치예산을 올해의 1백96억원에서 5백93억원으로 대폭 늘려 간접적으로 공단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천2백50개의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하도록 1백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1.8% 증액된 3천37억원이 편성됐다.

올 상반기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비로 1백9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소각시설 설치예산은 6백24억원에서 7백67억원으로 늘어났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 소각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도 65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환경기술분야 지원을 위해 1백47억원이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비로 편성됐다.

한편 97년도 환경부 예산(1조8백2억원)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났었다.

중국 환경개선에 시장경제 도입해야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대기오염원에 대한 과세와 유연 휘발유 사용 금지, 석탄 대신 천연가스 사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이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9월 19일 발표한 깨끗한 물, 푸른 하늘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고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심각히 오염된 환경을 개선키 위해 가격, 세금, 벌금 등과 같은 시장경제적 유도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에너지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피해 비용을 고려할 때 석탄가격이 1백%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25년간 평균 7%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청정기술을 도입하고 산업의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고속 경제성장이 물과 대기를 보다 깨끗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환경개선을 원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오염억제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기 및 물의 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연간 피해가 95년 GDP의 8%에 해당하는 5백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도시를 흐르는 1백35개의 강중에서 52개가 농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으며 연간 도시주민 17만8천명이 옥외 공기오염으로, 농촌주민 11만1천명이 석탄 난로와 풍로를 통한 옥내 공기오염으로 수명을 다하지 못한채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휘발유 납성분의 단계적 감축, 물과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한 가격의 적정 인상, 수자원 관리 및 대중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국적 정책조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과 대기 관리를 감독하는 지방부서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이 조속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용의주도하게 투자할 경우 오는 2020년 오염을 현재 수준 아래로 억제할 수 있어 공기와 물의 질이 향상되고 오염과 관련한 건강비용을 75%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U-미, 온실효과 대책싸고 신경전

온실효과에 대처하기위한 이산화탄소(CO2) 방출 억제 대책을 놓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EU와 미국,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재계가 물밑에서 벌이던 미묘한 줄다리기는 로빈 쿡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 9월 29일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쿡 장관은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가 미국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의 전망을 낙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고무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산화탄소 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업계의 총력적 반대 로비를 견제하고 클린턴 행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10월 6일 기후변화협약의 이산화탄소방지대책에 미국이 협조해야한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한 여론 정지 작업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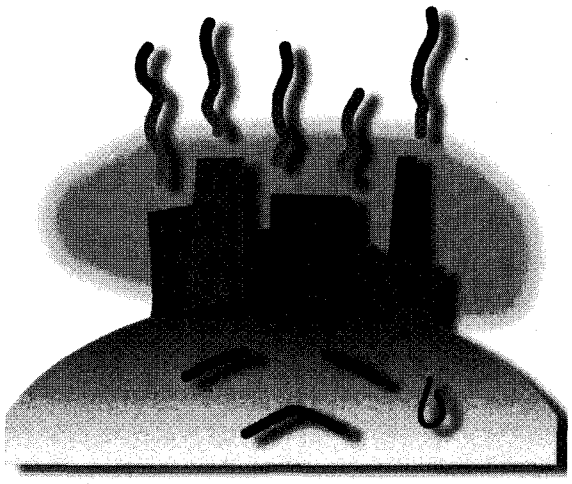
양측은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이번주 들어 약속이나 한 듯 상반된 견해를 잇따라 발표, 백악관 대회를 의식한 여론 장악을 시도했다.

EU와 미국 경제계간의 대립은 EU가 교토 회의를 의식, 올들어 강력한 이산화탄소방지 대책을 확정짓고 이를 밀고나갈 태세를 보인데서 비롯된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산업계는 경제 타격을 내세우며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사력을 다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EU는 올들어 EU전체 감축계획 및 회원국별 잠정계획을 마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90년 기준으로 2005년까지 최소 7.5%, 2010년까지는 15% 줄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EU는 미국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같은 대책이 실시돼도 EU 전체의 경제 성장이 1%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밖에 받지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이같은 입장을 백악관 대회에 앞서 이번주(?)에 공식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고만 있을 리는 없다. 미국 기업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경제전략연구소(ESI)는 미국이 이산화탄소 방출억제 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산업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9월 29일 내놓았다.

ESI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려면 연소율을 높이고 석탄과 석유의 대체연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기업활동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항공사와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산업 등이 유럽과 일본 산업과의 경쟁력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교토 기후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구속력있는 조치를 약속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듯 미 에너지부는 미국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않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오는 2010년까지는 지난 90년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는 산업계의 저항을 버텨내고 얼마나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지 바다 건너 유럽은 우려섞인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올해 UNEP 환경상에 미 언론인 선정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10월 3일 올해 UNEP-사사카와 환경상 수상자로 미 CNN 방송의 환경분야 담당 책임자인 바바라 파일씨(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UNEP는 파일씨가 지난 80년부터 CNN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주로 환경관련 분야의 보도와 특별 기획 취재 보도 등을 통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계도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출신의 갑부 사사카와씨의 기부금으로 설치된 이 상의 수상식은 오는 11월 12일 뉴욕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엘리자베스 다우드스웰 UNEP 총재, 테드 터너 CNN사장등 저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